



목 차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2017. 3.

금 융 위 원 회

I.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현황	1
II. 부실채권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2
III. 문제점	3
IV. 제도개선 방향	4
V. 세부방안	5
VI. 추진계획	7

I.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현황

□ (개념) 부실채권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하나,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로 개념 및 발생 경로가 다양

① 보증기관(주금공, 신·기보, 농신보 등) : 보증부 대출이 연체된 경우 보증부분을 대위변제(연체 후 3~6개월)하고 구상채권을 보유

② 매입기관(캠코, 예보) :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

* 예보는 KR&C(정리금융회사)를 통해 부실금융회사 매수자가 인수를 거부한 부실채권 또는 파산재단 종결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

③ 대출기관(미소재단 등) : 일반 금융회사와 같이 직접 대출한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

□ (규모)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가계+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16년말 현재 24.9조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

○ 대부분 무담보채권이며, 상각된 채권은 11.2조원(비중 : 45%*)

* 은행권(부실채권 중 상각채권 비중 77%)에 비해 상각채권 비중 낮음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조원, '16년말)>

	보증				매입		합계
	주금공	신보	기보	농신보	캠코	예보(KR&C)	
부실채권	2.2	3.1	1.0	5.3	10.9	2.3	24.9
미상각	1.4	0.9	0.3	0.5	8.8	1.7	13.7
상각	0.8	2.2	0.7	4.8	2.1	0.6	11.2
채무자(만명)	12.8	8.0	1.0	11.9	14.4	23.7	71.8

II. 부실채권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① (채무조정)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관별로 조건·방식이 상이하고 대체로 보수적으로 운용

○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절차이며, 채무조정의 대상 및 조건도 모호하거나 매우 엄격

○ 기관별로 원금감면 허용여부·범위·감면률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인정되는 분할상환기간도 기관별 최장 5년~10년으로 상이

② (회수관리) 금융회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상각하며 매각은 제한적

① (추심) 자체 추심만 하는 경우, 위탁 추심만 하는 경우, 상각채권 위주로 위탁 추심하는 경우 등 다양

- 회수금은 대체로 비용 → 원금 → 이자* 順으로 충당
(일부 기관은 비용 → 이자 → 원금 順)

* 각 기관별 내규에 따라 20% 이내에서 대위변제금에 부과(통상 8~12% 수준)

② (상각) 금감원장 승인이 아닌 자체 의사결정기구 의결로 대손상각

- 금융회사와 달리 상각유인이 적고*, 보수적인 채권관리 등으로 상각까지 3~10년 이상 소요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후 1년내 상각)

*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없고 대손상각을 통한 법인세 절감 유인도 적음

③ (매각) 금융회사와 달리 대부분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정책 및 내부사정 등에 따라 캠코 등에 일부 매각

③ (시효관리) 대체로 2단계로 나누어 소멸시효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 소멸시효 10년 연장)

① (1단계 : 기본관리)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연장) 조치 시행

② (2단계 : 연장시효관리)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

III. 문제점

◇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을 장기보유하고 기관별 관리방식 상이
→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어렵고, 관리상 비효율 발생

① 부실채권 관리가 조정·정리보다는 형식적인 채권 유지에 중점

❶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나, 임의절차로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극적·경직적 운용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❷ 위탁추심으로 인한 취약채무자 과잉추심 가능성*이 있고, 이자가 계속 붙는 '원금'이 후순위로 변제됨에 따라 상환의욕이 저하

* 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취약 채무자)을 추심의 강도가 높은 외부에 위탁

❸ 상각까지 장기간 소요* → 신복위를 통한 워크아웃 효과가 반감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불가)되고 채권정리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

* (은행) 연체후 1년내 상각 (금융공공기관) 기관별로 상각에 3~10년 이상 소요

❹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고령·소액채무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장기 보유 → 채무자 부담과 채권 관리비용 지속 발생

* 소멸시효(5년) 도래시 소송 등을 통해 10년 연장 → 최소 15년 이상 보유

② 기관별 이해관계와 상이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효율성·형평성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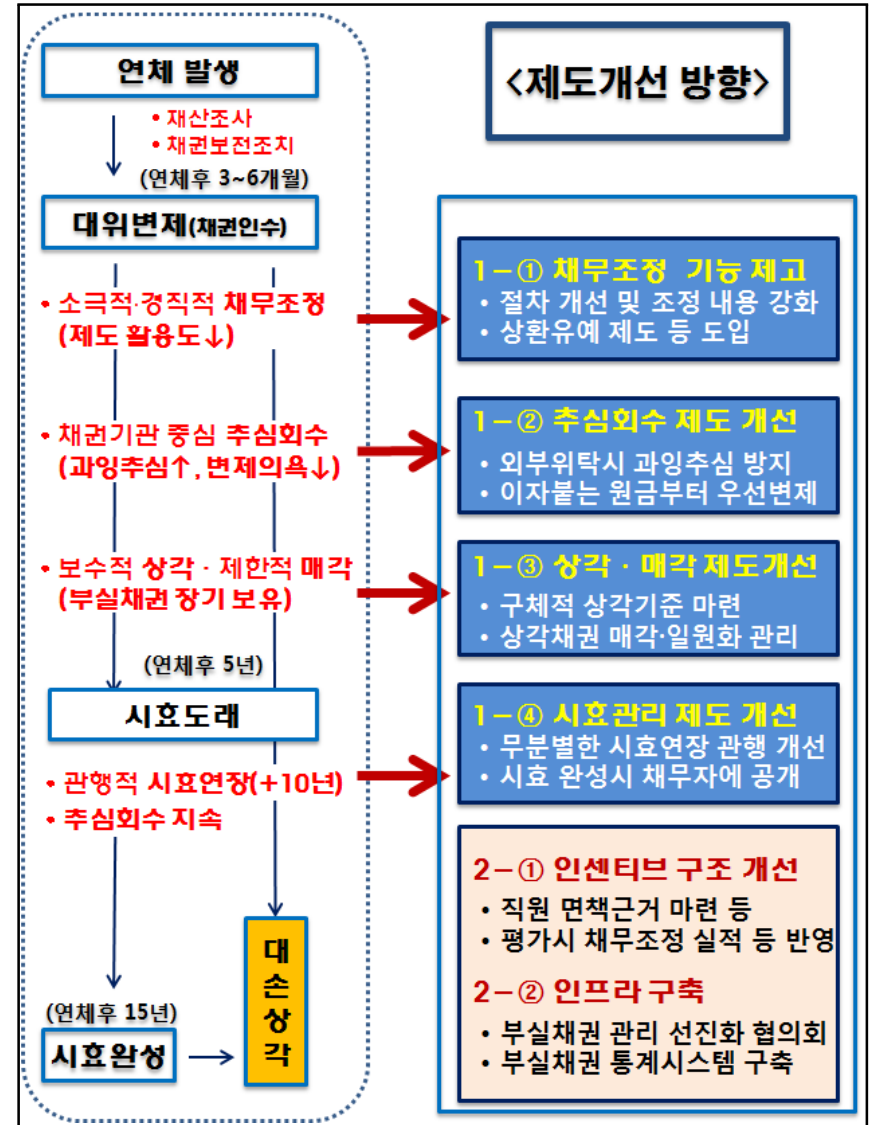
❶ 다중채무자의 경우, 채권기관간 이해차이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렵고, 기관간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

❷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 상각 및 채무조정 기준·방식 등에 따라 채무부담이 상이 →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

③ 공공기관에 대한 과실 위주의 감사·감독, 회수실적 중심의 기관평가 및 직원 인센티브 등으로 보수적 관리 관행이 고착화

IV. 제도개선 방향

◆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적극적 조정·정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



V. 세부방안

1. 관리 과정별 제도 개선 : 각 기관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타기관과 공유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에 일원화하여 관리
2. 기타 제도개선 : 부실채권 관리측면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모범사례 지속 공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부실채권 관리 모범사례 발굴·공유 및 상각채권 일원화 관리

※ 공공기관이 법상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소득정보 조회 권한을 활용하여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

① 채무조정 :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하여 기관 자율의 채무조정 기능을 보다 활성화

① (절차) 제도 안내 의무화 및 온라인신청 채널 구축 (캠코 예)

- 취약계층의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 (기간단축, 제출서류 간소화)를 도입 (예보 예)

② (내용) 원리금감면 관련 제도 개선,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최장 10년 내외) 등 채무조정 내용 강화 (예보·캠코·주금공 예)

③ (기타) 사고·실직 등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도입·강화하고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캠코 예*)

* 최장 2년 유예(예외적으로 최장 3년 또는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유예)

- 신복위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보증기관에도 확대 적용

* 신복위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가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

② 추심회수 :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변제의를 고취

① 외부 위탁시 추심회사가 불법·과잉추심하지 않도록 위임기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체계도 정비 (캠코 예*)

* 위탁기관의 과잉 추심행위에 대해 수수료 지급 및 중간평가시 페널티 부여

②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원금부터 우선 변제하도록 변제순서 변경

③ 상각·매각 :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의 적기 정리를 지원하여 관리상 부담을 완화하고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실적성 제고

① 모호하고 추상적인 상각기준을 공적기관 취지에 맞게 구체화

√ (원칙 : 기준일 설정) 회수 불가능, 회수실익 없는 경우 등(구체적 기준 없음)
→ 대위변제 또는 채권 매입후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 기준 추가

√ (예외 : 상각부인)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 既 채무조정 약정 체결 등
* 각 기관이 보유한 채권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기준 조정

② 상각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

※ 농신보 상각채권은 채권특성 등을 감안하여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하는 방안 검토

▼ (매각대상)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신·기보, 주금공, 예보-KR&C) 보유 “개인 상각채권” (금융공공기관들은 “특수채권”으로 분류)

▼ (매각방식) ①보유중인 상각채권은 '17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②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연 1회 정기 매각

▼ (매각가) ‘잔여이익 배분 확정가방식’ 활용 → 초과회수 이익 공유

* 평가기관(회계법인) 가치평가 후 매각가 산정 → 초과회수시 일정비율로 이익 공유

④ 시효관리 :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캠코 예*), 시효 완성시에는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안내 (예보 예)

* 2백만원 이하, 70세 이상인 경우 시효연장 안함 →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상 확대 계획

2. 부실채권 관리 인센티브 구조 개선 및 인프라 구축

① 인센티브 구조 개선 : 채권 회수·관리에 대한 직원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 채무조정 노력을 성과에 반영

* 적극적인 채무조정 업무수행이나 채무자 보호 노력 등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비효율,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채무조정 성과 및 부실채권 정리 실적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신·기보 예)

② 부실채권 관리 인프라 구축 :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 운영 → 모범사례를 지속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점검

* 금융위원회, 각 금융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참석 → 각 기관별 모범사례 공유, 부실채권 제도개선 진행 현황 점검, 상각채권 캠프 매각 관련 현황 점검 등

-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 시스템 구축 (캠코 주관)

[기대효과]

- ▶ **(채무자)** 상환의사·능력 있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는 과도한 장기추심에 따른 부담 경감
- ▶ **(채권기관)** 상환의욕 고취를 통한 회수율 제고,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 완화 및 부실채권 관리 조직·인력의 핵심역량 집중 가능
 - 향후,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비한 금융공공기관의 대응여력을 사전 확보
- ▶ **(국가·사회)** 재기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부실채권 장기·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비용 최소화 및 누증 방지로 재정부담 완화

VI. 추진계획

① 각 기관별 내규개정 후 '17.3분기 부터 시행(별도 입법조치 불요)

② 상각채권의 캠코 매각은 매각가 산정 후 '17.하반기 중 실시

※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개최('17.2분기)하여 제도개선 추진 현황 등 점검

[별첨] 추진일정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자체 채무조정 기능 제고			
1. 절차 개선	제도 안내 의무화(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온라인 신청 채널 구축	'17년말	
	Fast-track 제도 도입(내규개정)	'17.2분기	
2. 내용 강화	원리금감면 관련 제도 개선 및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등(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3. 기타 제도 보완	상환유예 제도 도입·강화(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성실상환 인센티브 도입(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추심회수 제도 개선			
4. 위탁 추심 개선	외부위탁시 관리·감독 강화 및 평가체계 정비(내규개정)	'17년말	각 금융공공기관
5. 총당변제 순서 개선	원금부터 변제 총당(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상각·매각 제도 개선			
6. 상각기준 구체화	구체적 기준 설정(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7. 상각채권 캠코 매각 제도화	매각가격 등 세부 매각방안 마련	'17.2분기	금융위, 각 금융공공기관
시효관리 제도 개선			
8. 관행 개선	취약계층, 소액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9. 시효완성시 공개	시효완성시 공개·안내(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인센티브 구조 개선			
10. 면책근거 마련 및 성과제도 개선	채권관리 직원 면책근거 마련 및 채무조정 실적 성과 반영(내규개정)	'17.2분기	각 금융공공기관
11. 경영평가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채무조정 성과, 부실채권 정리 실적 등 반영 추진	'18년부터	기재부, 금융위, 각 금융공공기관
인프라 구축			
12. 선진화 협의회 운영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 운영	'17.2분기	금융위, 각 금융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13. 통계 시스템 구축	부실채권 통합 통계시스템 구축	'17년말	캠코